

우즈벡 노동행정에 ‘K-AI’ 입힌다… 디지털 행정 협력 확대

노사발전재단, MOU 후속 구체화
노동감독·산업안전 역량 강화 지원
AI 상담·데이터 운영 사례 공유
정책자문·교육 프로그램 연계 추진
ODA 활용 후속사업 발굴도 검토

노사발전재단이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AI(인공지능) 기반 노동행정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재단은 향후 이 같은 고용·노동 국제협력사업을 늘려, 한국의 성공적인 고용노동 정책 및 디지털 행정 모델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12일 재단에 따르면 지난 6일 ‘우즈베키스탄 노동법·제도개선 정책자문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우즈베키스탄 공동세미나가 열렸다. 서울 총정로 소재 노사발전재단에 모인 양측은 노동보호법 개정, 노동감독제도 개선, 노동감독관 교육체계 구축 등 정책자문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올해 5월 재단-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퇴치부 간 체결된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AI 기반 노동행정 ▲노동감독 ▲산업안전 감독역량 강화 분야의 후속 협력방안을 구체화했다. 우즈베키스탄이 추진 중인 노동행정 디지털 전환 및



박종필(앞줄 가운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 6일 서울 총정로 노사발전재단에서 라노 예쇼브나 투르디보바예바(앞줄 오른쪽 4번째)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퇴치부 차관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동감독관 역량강화 정책에 한국의 제도·운영 경험을 접목한 것이다. 이는 실질적인 정책협력의 한 본보기가 될 전망이다.

양측은 한국의 AI 기반 노동행정 서비스 및 데이터 기반 행정운영 사례 공유에 더해, 양국이 추진해 나갈 AI 기반 디지털 노동행정 협력과 공적개발원조(ODA) 연계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행사에는 우즈벡 고용빈곤퇴치부의 라노 예쇼브나 투르디보바예바 차관과 국가 노동감독원, 산업안전국, AI 도입 및 개발부, 직원교육훈련센터 관계자 등이 참

석했다. 한국 측에선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담당자, 정책자문위원 등 노동행정 전문가가 다수가 자리를 함께했다.

박종필 사무총장은 “지난 5월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퇴치부와 체결한 MOU를 계기로, 양 기관의 협력이 노동법 제도 분야를 넘어 디지털 노동행정과 노동감독, 산업안전 감독역량 강화 등 실질적인 협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공동세미나와 초청연수는 한국의 제도와 디지털 행정 경험을 공유하는 것

을 넘어, 우즈베키스탄의 노동행정 혁신을 함께 설계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또 “재단은 그동안 축적한 노동정책 자문과 국제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고용노동 정책과 디지털 행정 모델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공공협력 플랫폼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협력국과 지속 가능한 고용노동 협력사업을 확대해 우리나라 노동행정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세미나 발표자로 나선 노동부 지능정보화기획팀의 김동현 과장은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한국의 노동행정 혁신’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AI 공통기반 플랫폼 구축과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운영 사례,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체계, AI 상담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언급했다. 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노동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한 경험을 공유했다. 우즈벡의 디지털 정부 및 노동행정 혁신에 적용 가능한 정책 모델과 시사점 등을 제시한 것.

우즈베키스탄은 ‘2024년 이후 노동 분야 법·제도 및 정책 변화’에 대한 발표에서, 한국의 정책 자문 이후 추진된 제도 개선과 향후 추진 과제 등을 언급했다. 양측은 이를 바탕으로 노동감독 제도의 현대화와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협력방안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교육, 정책 자문, 디지털플랫폼 구축 등 후속 협력사업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우즈베키스탄 대표단은 이날 2~8일 진행된 한국 초청연수 기간 국내외 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정 및 안전 체험교육 등도 참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송미령 장관, 농업인단체와 폭염 안전 캠페인

농식품부, 농업인단체 14곳과 발대식
8월 말까지 전국 농작업 현장서 전개
폭염 대응 5대 안전수칙 준수 당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2일 주요 농업인단체장 14인과 ‘농업분야 폭염 대응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 발대식을 갖고, 이달 말까지 캠페인의 전국적 확산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송 장관은 폭염 시 농작업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농업인 단체가 나서서 폭염 안전수칙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이끌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농업인 단체장은 8월 말까지 자체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현장의 농작업 문화를 바꿔 나가겠다고 ‘농업분야 폭염대응 안전수칙 실천 약속’을 낭독했다.

캠페인 슬로건으로 “폭염 속 휴식은 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 안전은 최우선의 가치”를 내걸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농업 분야 온열질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업인·외국인노동자 등이 폭염 시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한 농작업 문화를 만들자는 의미다.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제공 ▲냉방

·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작업시간 조정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개인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 시 119 신고 등이다.

앞서 8일 송미령 장관은 전북 익산 소재 육계 농장과 상추 시설하우스를 찾아, 폭염 대응 상황과 근로자 안전을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 작업을 중단하는 ‘농작업 멈춤’에 대한 현장 실천상황을 살폈다. 또 상추 시설하우스를 방문해, 농업인 및 외국인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농식품부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아울러, 현장에서는 가축과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축 사양관리와 농작물 생육관리 등 폭염 대응 요령을 실천해 주시고, 관계기관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동남권 ‘해양수도권’ 투자유치 본격화

해수부, 부산·울산·경남과 상생협약

해양수산부가 지자체 3곳 및 지역 상공회의소 등과 다자간 협약을 맺고 동남권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한 투자 유치에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달 13일 ‘해양수도권 조성 및 공동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다자간 협약에 참여하는 기관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상공회의소, 울산상공회의소,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와

이 협약은 동남권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해양·항만 기반 미래 신산업을 육성할 투자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협약참여기관들의 협력해 나갈 분야는 ▲해양수도권 조성 및 기업 투자유치 공동 전략 수립과 추진 ▲친환경 에너지·제

조AI 등 미래 성장산업 투자 기반 확충 ▲규제·제도 개선 및 현장 애로 해소 ▲공동 투자설명회 개최 및 글로벌 투자유치 네트워크 구축 ▲공동 홍보 협력 등이다.

해수부는 지난 2월 출범한 고위급 정책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와 지역 경제계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국무회의에서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향’을 마련했다.

이들 기관은 상생협약을 계기로 동남권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한 투자 유치에 나설 예정이다.

황중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수부와 지자체, 지역 경제계가 긴밀히 협력해 동남권이 하나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해양수도권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中 징동, 한국법인 세워 K-소비재 직매입

산업부·코트라, 입점 설명회·상담회

중국 최대 B2C 전자상거래 기업인 징동그룹(JD.com)이 한국에 전문 구매법인을 설립하고 K-소비재 직접 수입에 나선다. 중간 대리상을 거치지 않는 직매입 방식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들의 물류 및 결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2일 서울 양재동 코트라 본사에서 징동그룹과 공동으로 ‘징동닷컴 직매입 입점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 우수 소비재 기업 200여 개사가 참석했으며, 징동 구매담당자와의 1대 1 상담과 함께 국내 기업 9개사와 총 150만 달러 규모의 직매입 수출

계약 체결식이 진행됐다. 양치쿤 징동그룹 부회장은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K-뷰티, 식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한국 제품의 직매입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대중(對中) 소비재 수출은 지난 2021년 약 93억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지속 감소했으나, 현지 유통망 협력 등에 힘입어 올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한 34억 3700만 달러를 기록하며 반등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대금 결제가 안정적이고 마진율이 높은 직매입 방식의 수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한국마사회, 제주 불법도축 현장서 말 4마리 구조

올해 전북 포함 총 12마리 구조
학대·방치마 의무신고제 전환 추진

한국마사회가 최근 제주지역 불법도축 현장에서 말 네 마리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들 말은 제주도 지정 ‘말 보호시설’(제주대 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로 이송됐다.

더러브렛 1두와 한라마 3두다. 마사회는 긴급구호체계를 가동했고, 제주도청 및 말 보호시설과 협력해 안전하게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함에 따라 4두 모두 보호시설로 옮겨졌다.

지자체가 지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말 보호시설은 전북과 제주에 각 1개소씩 운영되고 있다. 마사회가 지자체와 협조해 구조한 말은 올해 총 12마리로, 전북 소재 말 보호시설(전북말산업복합센터)에서 8마리를 구조한 바 있다. 제주는 이번이 첫 사례다.

마사회는 말 학대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농식품부 지원을 받아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말 전문가를 말 보호관으로 위촉해 구조 현장에 투입하는 한편, 말 복지 취약지역 컨설팅도 병행한다.

경주마를 포함한 모든 말은 마주 개인

의 소유다. 마사회가 직접 관여할 법적 권한이 없는 탓에 구조 및 보호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와 마사회는 현행 자율신고 방식을 의무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말산업육성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우회중 한국마사회 회장은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는 학대·방치마 제보 접수부터 현장 구조까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창구”라며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를 중심으로 학대·방치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해 말이 보호받고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